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14
----------	------

발의연월일 : 2020. 11. 19.

발 의 자 : 김주영 · 주철현 · 오영환
이규민 · 김철민 · 이용우
용혜인 · 양정숙 · 서영교
장경태 · 김정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 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임원이 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함(안 제24조의2제1항).
- 다.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및 제52조의7 신설).
- 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임명할 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함(안 제30조제5항 신설).
- 마.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지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 바.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35조제4항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을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2.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제25조제3항 전단 중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을 “비상임이사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기업의 운영 및 공공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2.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제3항 후단 중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임명할 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보수기준”을 “보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의 수행이 불가

능하게 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직무정지 기간 동안 해당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그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에 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7(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① 기타공공기관이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기업 및 준정부기업 등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원회)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0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 <u>1. 해당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2.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u> <u>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u>
④ · ⑤ (생략)	
제24조(임원) ① ~ ④ (생략)	제24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	⑤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② (생략)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

----- .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 ① -----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1.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2.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

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
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략)

<신 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② (생략)

명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임이사를

— — ●

1. 공기업의 운영 및 공공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략)

③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2.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
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후단 신설>

⑦ · ⑧ (생략)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이 경우
외부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의 추천
을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p>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u>제50 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 다.</u></p>	<p>----- -----<u>대통령</u> 령-----.</p>
<p>④ (생략) <u><신설></u></p>	<p>④ (현행과 같음) ⑤ <u>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 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임 명할 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u></p>
<p>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의 수행 이 불가능하게 된 임원에 대해 여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직 무정지 기간 동안 해당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u></p>
<p>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 하여 그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u></p>

<p><u><신 설></u></p>	<p><u>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p> <p><u>제52조의7(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① 기타공공기관이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